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부정책 변함없다”

유은혜 부총리, 사립유치원 집단휴원 등과 관련 “학부모 위협 행위 엄정 조치”

한유총, 대토론회서 집단휴원 않기로... “개별 유치원의 움직임까지 막을 수 없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원 등 단체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해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30일 서울청사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관계부처 간담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사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어린이집을 안전한 교육·보육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며 “일부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원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학부모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사립유치원 단체의 집단행동이 있을 경우 공정위 차원의 조사에 대해 협의하고, 국제정과는 교육청 감사·비리 신고 조사결과에 대한 세부조사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이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과인을 수용해달라고 거듭 강조하며 “정부와 유치원·어린이집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사립유치원들이 휴·폐원 등 집단행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 대대적인 보육대란은 피했지만, 개별 유치원의 움직임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30일 11시부터 오후 4시40분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집단 휴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대토론회에는 5000여 명이 모였다.

한유총 관계자는 “집단행동에 대한 요구도 많이 나왔지만 비상대책위원

회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제정까지 동원해 전방위 압박을 하면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40분 가량 길어졌다. 대토론회가 끝난 이후 참석자들은 취재진이 기다리는 출입구가 아닌 뒷문을 통해 빠져나갔다.

이날 대토론회에서 박세규 한유총 고문변호사, 김정호 연세대 교수, 이학준 동아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이후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한유총은 토론회에서 미래지향적 정책대안을 제시해 대국민 대상으로 이해도 제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보다 ‘교육 평등권 보장’을 통한 교육 수요자의 학교 선택권 부여’라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완화를 줄이기 위해 교육비 지원을 높여달라는 주장의 연장선이다.

또한 유치원장들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해달라고 다시 요구했다. 한유총은 “설립자본에 대한 투자보수만 인정됐다면 회계 비리 등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공립 유치원 확충 방안과 관련해해서는 유아교육 다양성을 위해 사립유치원 존속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유총 비대위는 교육당국과 사립유치원, 교육전문가가 모인 정책간담회를 요구했다.

/장은성 기자

마재운 신임 전북도 소방본부장 취임



신임 마재운 소방본부장(사진)이 30일 취임한 가운데, 형식적인 취임식을 과감히 생략하고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관련 전국 소방지휘관 회의 준비 등 원활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정식 업무에 들어갔다.

마재운 소방본부장은 전라남도 강진 출생으로, 1990년 2월 소방간부 6기로 소방에 입문 ▲광주광역시 소방본부장 ▲충안소방학교 소방과학연구실장 ▲소방방재청 재난소방상황실장 ▲중앙소방학교 행정지원과장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 ▲경기도소방학교장을 역임한 소방분야 전문가로 실무경험에 바탕을 둔 균형 있는 시각과 리더십, 덕망 등에서 높은 신임을 얻고 있다.

마재운 신임 본부장은 “곧 다가올 화재 취약시기 등 재난에 방을 위한 안전관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며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 포함 7개道 國도 승격에 맞손

강원·충청 등과 공동건의문 채택

도, 전주~김제 지방도

國도 21호선 승격 강조

전북도를 비롯한 강원, 충청, 호남, 경상도의 7개 도는 30일 광주 힐튼호텔에서 국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도·국가지원지방도 연장 및 승격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공동건의문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실현을 위해 국도를 연장 지정하고 지방도를 국도·국지도로 승격해 줄 것을 담고 있다.

7개 도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국도와 지방도는 국가와 지역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견인하는 간선도로이나,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단절 해소에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간의 경제·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도 연장 지정과 승격이 긴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교통망 증가에 따른 출퇴근시간 상승 지정체가 발생하는 전주와 김제를 연결하는 지방도 716호

선(19.7km, 2,000억원)을 국도 21호선으로 승격해 줄 것을 핵심 사업으로 올려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방도 716호선은 호남고속도로와 연결되고, 새만금 및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요지에 위치한 도로이나, 시설확장을 위해서는 지방비 재원조달의 한계로 사업의 장기화가 우려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노선지정,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국도 승격을 건의하게 됐다.

한편, 국도와 국지도는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간선도로이며, 국가발전이 고속도로를 통해 가능했다면 지역발전은 구석구석 연결된 국도와 지방도를 통해 가능함에 따라 국도·국지도 승격의 구체화를 위해 7개도 핵심 사업을 직접 명시해 국회, 청와대,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용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전주~김제~새만금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인 지방도 716호선의 상습 지정체 해소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국도 승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행사가 30일 새만금개발공사 사옥에서 실시된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은 전북본부, 10월 도내 기업경기 조사 결과 발표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10월 10일부터 23일 중 440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경기조사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북지역 2018년 10월 제조업 업황은 BSI는 57로 전월(59)보다 2p 하락했으며 11월 업황전망 BSI(59)도 전월에 비해 4p 하락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적인 조사에는 2018년 10월 제조업 업황에는 BSI는 71로 전월보다 2p 하락, 11월 업황전망 BSI(72)는 전월에 비해 6p 하락될 것으로 조사 파악됐다.

또한, 10월중 전북지역 제조업체들

이 느끼는 경영애로사항으로는 내수부진(27.0%), 인력난, 인건비 상승(17.7%), 불확실한 경제상황(10.1%)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전월과 비교시 인력난, 인건비 상승(12.8%→17.7%), 경쟁심화(7.1%→10.1%),자금부족(5.2%→7.1%) 등의 응답 비중은 상승한 반면, 내수부진(35.9%→27.0%), 수출부진(8.5%→4.1%), 환율요인(4.9%→2.5%) 등의 응답 비중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10월 비제조업 업황은 BSI(66→64)는 전월보다 2p 하락했으며 11

월 업황전망 BSI(65→63)도 전월에 비해 2p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10월중 도내 비제조업체들이 느끼는 경영애로사항은 인력난, 인건비 상승(22.6%), 내수부진(18.9%), 경쟁심화(10.7%) 등이 상위를 차지했으며 전월과 비교시 인력난, 인건비 상승(18.8%→22.6%), 원자재가격 상승(3.4%→5.2%), 자금부족(8.4%→9.0%) 등의 응답 비중은 상승한 반면, 내수부진(22.5%→18.9%), 경쟁심화(11.3%→10.7%) 등의 응답 비중은 하락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정읍시 공고 제2018-1103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정연장 공람공고

정읍시 고시 2015-96호(2015.11.20.)고시한 우리시 소성면 주천리 일원 「최첨단 의료복합 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사항에 대하여 기간(2015.11.20~2018.11.19.)이 만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연장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1. 개발행위허가의 제한내용

가. 제한조서

제한지역	제한면적 (㎡)	제한대상 행위	제한기간	비고
용계동, 공평동, 소성면 주천리 일원	1,284,523	건축물설치, 공작물설치, 토지정리, 변경, 토석채취, 토시분할, 물건적치	2018. 11. 20 2020. 11. 19 (연장)	연장

※ 용계동 43필지 347,668㎡, 공평동 37필지 81,244㎡, 소성면 주천리 317필지 855,611㎡

나. 제한사유 : 「최첨단 의료복합 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역내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계획적 개발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연장)

2.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가. 공람기간 : 2018. 10. 30. ~ 2018. 11. 12.

나. 공람장소 : 정읍시청 도시계획과, 특구지원과

3. 관계도서 : “계제생략”

4. 기타사항 : 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도시계획과(☎063-539-5782), 특구지원과(☎063-539-56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30일 정읍시장

▶ 부록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지형도면고지도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